

# 우리 지역에 맞는 수소도시, 기준과 지원은?

- '27년 수소도시 선정 앞두고 2월 10일 지방정부 대상 사업 설명회 열려

- 수소를 활용한 주거·교통·산업 인프라를 우리 지역에 도입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다. 정부가 '27년 수소도시 조성사업 선정을 앞두고, 지방 정부를 대상으로 사업 기준과 지원 내용을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해 지역 여건에 맞는 수소도시 조성을 지원한다.
- 국토교통부(장관 김윤덕)는 '27년 신규 수소도시 조성사업 선정을 위해 지방 정부를 대상으로 2월 10일 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.
  - \* (시간/장소) '26.2.10(화) 13시 / 서울 과학기술컨벤션센터 대회의실
  - 수소도시 조성사업은 수소를 주거, 업무, 교통, 산업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생산·이송·저장·활용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으로, 국비 200억원\*과 함께 준공시까지 전문기관의 컨설팅, 안전관리 등을 지원한다.
    - \* 총 400억원(국비 200억원, 지방비 200억원) 기준, 사업여건을 감안하여 조정 가능
- 이번 설명회에서는 수소도시 조성사업의 정책방향, 사업 지원기준, 지원 내용 등을 포함한 사업 가이드라인을 안내할 예정이다.

## [ '27년 수소도시 조성사업 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 ]

부문	상세 요구사항	사업비
생산·공급	(필수) 수소 1톤/일 이상 생산 또는 공급 (선택) 청정수소 생산 또는 기존 수소인프라 연계	-
이송·저장	(선택) 수소 배관망 구축	50% 이상
활 용	충전소·연료전지 (필수) 충전소 또는 수소 연료전지 구축	
	모빌리티 (선택) 타부처 보조금 지급 대상은 제외	
	기타 (선택) 수소 활용설비 설치	
안전	(필수) 통합안전운영센터 구축	10% 이하

○ 수소도시 조성사업은 '20년 울산, 안산, 전주·완주를 대상으로 한 시범 사업을 시작으로, 현재 총 15개 시·군\*에서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.

\* ('23) 평택, 남양주, 당진, 보령, 광양, 포항 ('24) 양주, 부안, 광주동구 ('25) 울산, 서산, 울진 ('26) 청주, 영암, 안산

□ 설명회 이후에는 지능형 발전소 운영시스템 기술 도입 방안 등 수소 공급 및 안전 관련 최신 기술을 공유하는 수소도시융합포럼\*도 이어질 예정이다.

\* (수소도시융합포럼) 수소도시 관련 기술개발, 산학협력, 법·제도 정비, 보급확산 논의를 위해 지방정부, 공기업, 연구원, 기업, 학계 등 156개 기관으로 구성

□ 국토교통부 최병길 도시활력지원과장은 “'27년 수소도시 조성사업은 수소 생산과 활용 부분의 기준을 강화하여 보다 효율적인 수소도시 조성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”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도시정책관 도시활력지원과	책임자	과 장	최병길 (044-201-3730)
		담당자	사무관	박가나 (044-201-3733)
			주무관	안영경 (044-201-4849)

## 참고

## 수소도시 추진 배경 및 개념

- 수소 생태계 조성을 위해 국내외 수소 생산, 수소발전, 인프라(배관망·충전소 등), 모빌리티, 기술개발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나
  - 수소가 실질적인 에너지원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도시의 관점에서 종합적인 접근 방식 필요
- 수소도시란 수소를 가정·건물, 수송, 발전 등 생활·산업에 활용할 수 있는 기반시설(생산·이송·저장·활용)을 갖춘 수소특화도시

【 전국 수소도시 현황 (’26.1월 기준) 】

